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 형 근

경찰대학교

조 은 경†

동국대학교

이 미 선

동양대학교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이나 왜곡의 우려가 있어 법령에 의한 통제 및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각종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사지휘자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0명의 수사지휘자들을 서로 다른 조서(원본조서, 조작조서, 생략조서)를 보는 조건에 30명씩 할당하고 조서검토 전후의 혐의평가 점수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및 63명의 수사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조서 통제 방식과 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왜곡된 조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조작조서뿐만 아니라 생략조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조서 왜곡에 관한 학습효과 및 선택적 강화효과 모델'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모의 혐의평가 상황의 연출 등 연구의 의의와 생태학적 타당도의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주요어 : 조서왜곡, 조작, 생략, 수사지휘자, 혐의평가

* 본 연구는 이형근(2016)의 박사학위 논문 제3장의 연구3을 수정·보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준칙 제정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재해석한 것임.

† 교신저자: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E-mail: ekjo@dongguk.edu

물적 증거과 더불어 인적 증거는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이며, 피의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인적 증거의 대표적 예다(손동권, 신이철, 2016, p. 517). 다만, 인적 증거는 물적 증거에 비해 주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김현숙, 2008, pp. 51-61; 이형근, 2019). 종래에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했으나(2019.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16850호 제196조 제1항),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였다(2020. 2. 4. 일부개정 법률 제16924호 제195조 제1항). 따라서 향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오롯이 상급 사법경찰관에게 귀속되게 되었다(장승혁, 2020). 요컨대,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인적 증거가 사용되고 있고,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해 법령에 의한 통제 및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상급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령과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 문제는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형근, 조은경, 2014). 관련 연구에 의하면, 수사관은 심증의 영향으로 인해 조서를 왜곡한다는 사실(이형근, 2016, p. 49),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은 조서의 왜곡을 모두 정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형근, 2016, p. 66, 72)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서작성 및 조서정정 단계에 있는 조서에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각종 수사행위에 대하여 상급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서평가(지휘·감독) 단계를 거친 조서에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Leo와 Davis(2010)는 통상 형사절차에서 최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선행절차에서 후행절차로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여과된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상급 사법경찰관이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기보다 조서에 의해 각색되고 생략된 정보(진술)에 의존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판단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의 왜곡이 경찰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 경찰 수사지휘자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를 설문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관련 법제의 개관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조서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이재상, 2014, pp. 593-594),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김현숙, 2008, pp. 51-61; 이형근, 2019). 통제장치에는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형사소송법 제243조의3), 조서의 열람·정정제도(제244조 제2항, 제3항), 영상녹화제도(제244조의2), 수사과정 기록제도(제244조의4) 등 기록 국면에 관한 것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자백배제법칙(제310조), 전문법칙(제312조) 등 평가 국면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요컨대, 신문 및 조서작성 과정에서는 피의자, 변호인 및 영상녹화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고,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법칙 및 법관에 의한 통제가 가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제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수사관 및 수사지휘자라면 조서의 왜곡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저항력 내지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법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해 왔으며(제196조), 여기에는 일반적 지휘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신동운,

2014, pp. 74-7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병존하고 있었으나(박노섭, 2010; 오상지, 2011), 피의자신문 및 조서작성이라는 수사행위가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신동운, 2014, p. 76; 이재상, 2014, p. 102). 가령, '309동 성폭행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수사 사례에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조서의 왜곡을 검사가 발견하여 구속된 피의자 4명을 석방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따라서 수사지휘권에 의한 조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조서의 왜곡을 일정 수준 초과해 낼 수 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였다(제195조 제1항). 물론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제197조의2), 시정조치 요구권(제197조의3)은 인정되지만, 향후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기본적으로 경위 이상 경무관 이하의 상급 사법경찰관에게 귀속될 전망이다(장승혁, 2020). 구 형사소송법(제195조, 제196조) 및 구 경찰법(2018. 4. 17. 일부개정 법률 제15566호 제24조) 하에서는 상급 사법경찰관이 경찰수사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의 지휘권만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전반적 지휘권을 갖는 상급 사법경찰관이 조서작성을 비롯한 인적 증거 수집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서의 왜곡

왜곡의 형성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기록한 서면에는 일정 수준의 왜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용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축어적 기록(verbatim)과 진술보고서(report)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고(Coulthard, 2002),

용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진술보고서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van Charldorp, 2012),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축어적 기록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Lamb, Orbach, Sternberg, Hershkowitz, & Horowitz, 2000).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조서를 비교·분석한 국내의 사례연구에서는 양자의 양적 차이가 평균 80%에 달한다는 사실, 그 중 왜곡으로 볼 수 있는 차이도 평균 20%에 이른다는 사실, 왜곡은 '조작' 형태와 '생략' 형태로 대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형근, 조은경, 2014). 요컨대, 진술의 주체, 기록의 주체, 기록의 형태를 불문하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에 관한 서면기록에는 일정 수준의 왜곡이 존재한다.

진술에 관한 서면기록의 왜곡 원인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가령, 수사관의 심증 또는 편향(박노섭, 2004; Leo & Davis, 2010), 용의자의 진실성을 판단하려는 경향(Meissner & Kassir, 2004), 서면화 과정에서의 간극 및 중첩(엄명용, 2004. pp. 71-73; Komter, 2006), 수사업무의 특성 및 수사환경(이윤, 2015, p. 3; Leo & Davis, 2010; Meissner & Kassir, 2004)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국내의 실험연구에서는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는 생략 형태가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형근, 2016, p. 49). 요컨대, 조서의 왜곡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는 수사관 개개인의 자질 함양이나 관행 개선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곡의 정정

형사소송법은 조서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의 조서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조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제244조 제2항, 제3항)이 포함된다. 먼저, 형사소송

법은 피의자의 조서 열람 및 정정에 관하여, '피의자의 조서열람 - 기재 및 사실 동일성에 대한 수사관의 확인 질문 -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 또는 의견 진술 - 이의 또는 의견의 조서 기재 - 피의자의 자필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신문참여 변호인의 조서 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제243조의2 제4항). 한편, 2020년 제정 수사준칙은 신문참여 변호인의 조서열람 및 정정요청권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2020. 10. 7. 제정 대통령령 제31089호 제14조 제1항). 요컨대,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의 조서 열람 및 정정은 조서에 존재하는 각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통제장치다.

그런데 조서정정 단계에 관한 국내의 실험연구에서는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이 조서의 왜곡을 모두 정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형근, 2016, p. 66, 72). 가령, 조서정정 과정에서 조작정정의 수행보다 생략정정의 수행이 더 저조하다는 사실, 법리적 요인으로 인해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사실적 요인으로 인해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공통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의 조서 열람 및 정정이 조서의 왜곡에 대한 직접적 통제장치인 것은 맞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공히 조서에 존재하는 모든 왜곡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모형

통상 의사결정 모형은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과정 형태를 띠고 있다(Bazerman, 1994).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도 일상적 의사결정 모형을 수사 장면에서 접목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식, 2014, pp. 121-128).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모형은 크게 수학적 모형과 설명 중심 모형으로 대별되고, 특히 후자는 형사절차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재현, 2010, p. 255). 설명 중심 모형의 대표적 예인 스토리 모형(story model)은 '재판과정을 통해 접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구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Pennington & Hastie, 1986, 1993).

Pennington과 Hastie(1986, 1993)는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 상황을 시간적 또는 인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만든 후 가장 포괄적이고, 일관적이며, 특징적인 이야기를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스토리 모형은 살인 사건(Pennington & Hastie, 1992), 강간 사건(Olsen-Fulero & Fulero, 1997), 성희롱 사건(Huntley & Constanzo, 2003)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토리 모형은 판사나 배심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판사나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구조화도 설명해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광배(2014)는 스토리 모형의 관점에 입각하여 "사실판단자의 추론과정을 직관적으로 잘 아는 유능한 검사는 국가가 보장하는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하여 수집된 증거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합해서 사실판단자의 사건 이해 혹은 정신모형이 최대한 앞뒤가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고,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며, 시공간 차원에서 경험적 무리와 논리적 모순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오직 한 가지의 자연스러운 결론만 가능하도록 구성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요컨대, 일정한 이야기의 형성 및 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메커니즘은 수사지휘자가 왜곡된 조서로 인해 잘못된 이야기를 형성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조서 왜곡의 동기를 가질 가능성까지 설명해 준다.

조서의 왜곡과 의사결정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이 제안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은 모형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Wagner(1991)는 실제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자들은 모든 정보가 수집되기 전에 실행에 착수하는 경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정보나 정보의 부족에 대한 강한 내성(무던함)을 갖는다고 보았고, Das와 Teng(1999)은 의사결정자들은 사전에 가설을 설정하고 한정된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 한정된 대안과 정보에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범죄수사에서의 의사결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동희 등(2014, p. 131-132)은 수사과정에서 의사결정자들은 인지과정을 단순화하려는 경향, 설정한 가설을 유지하려는 경향, 동료의 의견이나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Chisum과 Turvey(2010, pp. 52-53)는 맥락편향, 확증편향, 결과편향, 내집단편향, 맹점편향, 부정성편향, 회피편향, 선택편향, 권위편향, 자위편향, 정보편향, 부작위편향과 같은 다양한 인지적 편향이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지적 편향은 조서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면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조서작성자가 신문과 조서작성을 ‘업무’로 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수사지휘자는 조서작성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권위편향과 내집단편향이 발현되는 부분이다. 갈등 상황에서는 집단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신홍임, 2017),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지적 편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서는 모든 문답과 ‘맥락’이 그대로 기록된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성자에 의한 ‘여과’를 거친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수사지휘자는 조서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확증편향, 맹점편향, 선택편향 및

정보편향이 발현되는 부분이다. 조서의 왜곡은 일종의 ‘메시지 프레이밍’이다. 메시지 프레이밍이 의도된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성세연, 정경미, 2018), 조서의 왜곡은 작성자가 의도한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서에는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서의 왜곡이 문제 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문제가 되더라도 형사절차의 ‘후반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지휘자는 조서의 왜곡 통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조서작성 단계 또는 적어도 수사진행 중에 조서의 왜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 조서작성자와 수사지휘자 모두 조서의 왜곡 문제를 좀 더 쉽게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즉각적 환류), 수사종결 후에 이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면 같은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 및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지연된 환류). 결과편향과 회피편향이 발현되는 부분이다. 환류의 지연이 의사결정의 경직성과 환류에 대한 저항을 유발한다는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Brehmer, 1992), 조서의 왜곡이 뒤늦게 문제 되는 형사절차의 특성이 적극적 조서검토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Leo와 Davis(2010)는 편향이 오심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관련 정보의 점진적 여과’ 현상을 제안하였다. 즉, 형사절차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선행절차에서 후행절차로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여과되는데, 점진적 여과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및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 모두와 연관된다고 보았다. 먼저, ‘증거수집 과정’에서 수사는 특정한 용의자 또는 용의자 군의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증거평가 과정’에서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여과되어 전달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Wells와 Leo(2008)는 진술증거수집 과정에서도 수사관에 의한 정보의 여과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Findley와 Scott(2006)은 의사

결정자는 최종적으로 정서(正書)된 보고서만 보기 때문에 신문기법, 신문시점, 신문 당시 용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수사관에 의해 여과된 제약적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요컨대,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정해진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는 다양한 오류 요인이 개입할 수 있으며, 진술증거를 각색 또는 생략하는 조서의 왜곡은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서의 왜곡이 경찰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지휘자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도록 한 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측정하고, 이어서 서로 다른 조서(원본조서·조작조서·생략조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다시 한 번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연구 1의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왜곡된 조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영향은 ‘피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둘째, 조작된 조서뿐만 아니라 생략된 조서도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절차에서의 정보 각색 및 여과는 후행절차에서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Findley & Scott, 2006; Leo & Davis, 2010; Wells & Leo, 2008), 조서의 왜곡도 진술이라는 정보의 각색 및 여과에 해당되어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연구 2에서는 수사부서 팀장 또는 과장급의 경찰 수사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를 확인할 것이다. 연구 1은 수사지휘자가 조서

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지휘자가 영상녹화물 검토, 신문 참관과 같은 방법으로 양자를 비교·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 1의 예언과 같이 왜곡된 조서가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수사지휘자는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함으로써 왜곡된 조서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지휘자가 영상녹화물 검토, 신문 참관과 같은 방법으로 양자를 비교·검토하는 빈도를 확인하여 조서 왜곡의 현실적 영향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2를 통해서는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선행연구(이형근, 2020a, pp. 75-82), 수사부서 팀장 및 과장의 검토를 거친 조서에도 각종 왜곡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이형근, 조은경, 2014)를 고려한 예언이다.

연구 1: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

수사부서 팀장 또는 과장급의 경찰 수사지휘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조서가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세 집단 설계를 하였고, 참여자들이 수사지휘를 공통 업무로 하기 때문에 수사지휘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이 현저히 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검증력 분석 없이 조건 당 30명 할당을 목표로 총 9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전문교육 중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보상 계획(연

구결과 및 조서검토의 유의사항 피드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한 교육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85명(94.4%) 여성이 5명(5.6%)이었고, 연령은 30대가 22명(24.4%), 40대가 51명(56.7%), 50대 이상이 17명(18.9%)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수사 경력은 12.36년(표준편차 = 5.931)이었고, 현 소속 부서는 수사과가 43명(47.8%), 형사과가 25명(27.8%), 여성청소년과 등 기타 부서가 22명(24.4%)이었다.

연구방법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도록 한 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1차로 측정하고, 참여자들을 왜곡이 없는 조서를 보는 조건(원본조서 검토 집단), 조작이 처치된 조서를 보는 조건(조작조서 검토 집단), 생략이 처치된 조서를 보는 조건(생략조서 검토 집단)에 각각 30명씩 무선으로 할당된 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2차로 측정하여 두 측정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연구 1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서검토 전후로 참여자의 혐의평가를 두 번 측정하여 비교하는 반복측정 설계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재료에 설정된 사건개요와 수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5. 8. 5. 12:30경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00 소재 ‘풍경이 있는 꽃집’에 들어가 피해자 나피해(35세, 여)가 계산대 아래에 놓아 둔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이상 사건개요).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청취, 현장상황 확인을 거쳐 김길동을 용의자로 선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의 지휘를 맡은 수사지휘자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평가해야 한

다(이상 수사사항).

연구재료

실험재료는 절도사건 수사기록, 1차 혐의측정 및 설문지,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2차 혐의측정 및 설문지로 하였다. 첫째, 절도사건 수사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록된 수사보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한 종류를 제작하였다. 수사보고서에는 사건의 발생, 당일의 상황, 탐문수사 결과, 지문감정 결과, 전과확인 등에 관한 수사사항을 기재하였다. 둘째, 1차 혐의 측정 및 설문지는 수사기록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항 및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1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사기록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항은 용의자의 직업, 범행시간, 범행장소, 피해품의 금액, 채취된 지문의 개수에 대한 4지선다 형으로 설계하였다.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범인일 가능성 낮음, 4점: 알 수 없음, 7점: 범인일 가능성 높음)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록된 피의자신문조서 서식을 이용하여, 먼저 왜곡이 없는 원본 피의자신문조서 1을 만들고, 거기에 조작 또는 생략을 처치하여 조작조서 검토 집단용 피의자신문조서 2와 생략조서 검토 집단용 피의자신문조서 3을 제작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꽃집 방문 전의 행적에 관한 문답 5개, 꽃집 방문 중의 행위에 관한 문답 4개, 마무리 문답 2개 등 총 11개의 문답을 수록하였다. 그림 1(a)는 CCTV 관련 문답의 조작·생략 예시이고, 그림 1(b)는 지문 관련 문답의 조작·생략 예시이다.

이와 같은 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러한 진술과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사사항과의 연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피의자는 꽃집에 방문하기 전에 인접한 가구점을 외부에서 구경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수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인테리어 가구점 The Story 정면의 좌우에 설치된

원 본	<p>문 : 그날 인테리어 가구점 The Story에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p> <p>답 : 아니요. The Story 가구점에 방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가구를 구경한 것이 전부예요. 그 즈음 그 가게에 눈에 띄는 DIY 수납함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p>	문 : 계산대 쪽으로 간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구경을 마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했죠.
조 작	<p>문 : 그날 인테리어 가구점 The Story에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p> <p>답 : 아니요. The Story 가구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날은 그 가구점 근처에 간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 ‘기본적 답변’에 대한 ‘조작’</p>	문 : 계산대 쪽으로 간 사실이 있나요? 답 : 아니요. → ‘기본적 답변’에 대한 ‘조작’
생 략	<p>문 : 그날 인테리어 가구점 The Story에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p> <p>답 : 아니요. → ‘부가적 답변’의 ‘생략’</p>	문 : 계산대 쪽으로 간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 ‘부가적 답변’의 ‘생략’

그림 1(a). 피의자신문조서 5번 문답에 대한 조작 및 생략 처치 샘플. *기본적 답변은 ‘질문과 직접 연관된 답변으로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임. ^b부가적 답변은 ‘질문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임.

그림 1(b). 피의자신문조서 8번 문답에 대한 조작 및 생략 처치 샘플

CCTV를 확인한 바, 용의자 김길동과 용모 및 인상착의가 흡사한 남자가 The Story 앞에서 가구점 내부를 1분 가량 들여다보는 장면(2015. 8. 5. 12:18-12:19), 풍경이 있는 꽃집 앞으로 이동하여 꽃집 앞에 진열된 꽃을 1분 가량 들여다보는 장면(12:19-12:20), 꽃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12:21)이 각각 확인됨.” 따라서 The Story 방문에 관한 진술의 조작 또는 생략은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사항 간에 모순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꽃집 계산대에서는 채취한 지문 7점 중 2점이 피의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수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풍경이 있는 꽃집 계산대에서 채취한 지문 7점에 대한 감정결과를 확인한 바, 지문 7점 중 5점은 피해자 나피해의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2점은 용의자 김길동의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계산대 쪽으로 간 사실에 관한 진술의 조작은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사항 간에 모순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부가적 진술의 생략

은 피의자가 계산대 쪽으로 간 이유, 가령 절취 또는 다른 목적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게 된다.

넷째, 2차 혐의측정 및 설문지는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2차 문항 및 참여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문항에는 1차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1점: 범인일 가능성 낮음, 4점: 알 수 없음, 7점: 범인일 가능성 높음)를 적용하였다. 참여자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수사경력, 현 소속 부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절차

실험절차는 참여자 안내, 수사기록 검토, 1차 혐의측정 및 설문, 조서검토, 2차 혐의측정 및 설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자 안내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 취지 소개, 참여 동의서 작성, 유의점 설명을 5분간 실시하였다. 유의점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전후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평가를 두 차례 할 것인

데,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참여자가 갖게 된 주관적 판단에 부합하는 수치(1~7점)를 선택하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둘째, 수사기록 검토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수사보고서를 5분간 읽고 수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1차 혐의측정 및 설문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수사기록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질문'과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넷째, 조서검토 단계에서는 집단별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조서, 조작조서, 생략조서)를 5분간 읽고 진술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2차 혐의측정 및 설문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질문'과 '참여자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차 혐의평가와 2차 혐의평가가 달라진 또는 달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조서 왜곡의 효과

서로 다른 피의자신문조서(원본조서, 조작조서, 생략조서)가 경찰 수사지휘자의 피의자에 대한 혐의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서 유형에 따른 조서검토 전후 혐의평가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7) = 33.33, p < .001, \eta_p^2 = .434$. 조서유형별 차이를

확인해 보면, 원본조서를 검토한 집단의 혐의평가 점수 평균은 1차 5.367점(표준편차 = .964)에서 2차 4.267점(표준편차 = 1.659)으로 조서검토 전의 혐의평가 점수에 비해 조서검토 후의 혐의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t(29) = 4.557, p < .001, d = 0.762$). 반면, 조작조서를 검토한 집단의 혐의평가 점수 평균은 1차 5.300점(표준편차 = .988)에서 2차 6.433점(표준편차 = .679)으로($t(29) = -6.624, p < .001, d = 1.334$), 생략조서를 검토한 집단의 혐의평가 점수 평균은 1차 5.133점(표준편차 = 1.252)에서 2차 5.700점(표준편차 = 1.208)으로($t(29) = -3.084, p = .004, d = .487$), 각각 조서검토 전의 혐의평가 점수에 비해 조서검토 후의 혐의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표 1 참고).

한편, 피의자신문조서(원본조서, 조작조서, 생략조서) 검토 후 혐의평가의 방향이 바뀐(유죄 ↔ 무죄) 참여자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혐의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4점 이하인 경우 무죄심증, 5점 이상인 경우 유죄심증으로 변환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원본조서의 경우 30명 중 무죄심증이 6명(20%), 유죄심증이 24명(80%)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유죄심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서검토 후에는 무죄심증이 17명(56.7%), 유죄심증이 13명(43.3%)으로 변경되었다. 조작조서의 경우 원본조서와 동일하게 무죄심증이 6명(20%), 유죄심증이 13명(80%)이었으나, 조서검토 후에는 30명 전원이 유죄심증으로 변경되었다. 생략조서의 경우 사전점수는 무죄심증과 유죄심증이 각각 11명(36.7%), 19명(63.3%)이었으

표 1. 조서유형에 따른 조서검토 전후 혐의평가 점수

조서유형	n	혐의평가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검토 전	검토 후
원 본	30	5.37 (.96)	4.27 (1.66)
조 작	30	5.30 (.99)	6.43 (.68)
생 략	30	5.13 (1.25)	5.70 (1.21)
총 계	90	5.27 (1.07)	5.47 (1.53)

표 2.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전후 혐의평가의 방향 변화(유죄 ↔ 무죄)

	원본		조작		생략		총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무죄심증 [ⓐ]	6 (20.0)	17 (56.7)	6 (20.0)	1 [ⓐ] (0.0)	11 (36.7)	7 (23.3)	23 (25.6)	25 [ⓐ] (27.4)
유죄심증	24 (80.0)	13 (43.3)	24 (80.0)	30 (100.0)	19 (63.3)	23 (76.7)	67 (74.4)	66 (72.5)
총계	30 (100.0)	30 (100.0)	30 (100.0)	30 (100.0)	30 (100.0)	30 (100.0)	90 (100.0)	91 [ⓐ] (100.0)

주. [ⓐ]조작조서를 검토하고 2차 혐의평가에서 무죄로 평가한 참여자가 한 명도 없어 가설적 데이터 1을 삽입하여 분석하였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7점 척도의 중간에 위치하는 4점을 무죄심증으로 분류하였음.

나, 조서검토 후에는 무죄심증이 7명(23.3%), 유죄심증 23명(76.7%)으로 변경되었다. 사전 혐의평가 점수와 사후 혐의평가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바, 모든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원본조서: $\chi^2(1, N = 90) = 5.735, p < .05$; 조작조서: $\chi^2(1, N = 90) = 4.138, p < .05$; 생략조서: $\chi^2(1, N = 90) = 15.771, p < .001$.

혐의평가 변화의 원인에 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바) 지문 및 CCTV에 관한 수사사항과 피의자의 진술이 모순되어 유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응답(무죄 → 유죄 평가자),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바) 꽃을 구입하고 계산을 했으므로 계산대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응답(유죄 → 무죄 평가자)이 있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왜곡된 조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본조서를 본 집단과 달리, 왜곡조서를 본 집단은 조서검토 전 혐의평가보다 조서검토 후 혐의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작조서뿐만 아니라 생략조서도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작조서를 본 집단뿐만 아니라 생략조서를 본 집단도 조서검토 후의 혐의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의 취약성(Chisum & Turvey, 2010, pp. 52-53; Das & Teng, 1999; Wagner, 1991), 정보의 여과에 따른 의사결정의 오류 가능성(Findley & Scott, 2006; Leo & Davis, 2010; Wells & Leo, 2008)을 지적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서작성 단계에서는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형근, 2016, p. 49), 조서정정 단계에서는 생략정정이 더 적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형근, 2016, p. 66, 72)을 고려하면, 생략조서도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형사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 1은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조서 왜곡의 효과를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론은 향후 관련 연구(여타 수사기록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확인, 조서의 왜곡이 검사의 기소 판단 또는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확인)의 수행

에 적용 가능한 일방법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과 분석에 반복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차 변인이 연구 결과의 해석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였는데, 이 부분도 관련 연구에 적용 가능한 수법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연구 1에는 다음 같은 방법론적 제약이 병존한다. 첫째,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문답) 등 실험재료의 분량이 실제 수사기록의 분량에 비해 적었다. 천정효과나 바닥효과를 방지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측정치의 차이를 보기 위해 예비연구 단계에서 다양한 실험재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실험 재료의 분량이 줄어들었는데(간략하면서도 인상적인 수사기록 제작), 이로 인해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가 일정 부분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낀 현실감 부족과 몰입도 저하도 생태학적 타당도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경찰 수사지휘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인 관계로, 그 결과를 수사지휘자 전체 또는 판사의 의사결정에까지 일반화할 수 없다. 검사,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2: 수사지휘자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

연구대상

수사부서 팀장급 또는 과장급의 경찰 수사지휘자 6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경찰청 산하의 경찰관서에 근무중인 수사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보상 계획(연구결과 및 조서검토의 유의사항 피드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수사지휘자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55명(87.3%), 여성이 5명(12.7%)이었고, 연령은 20대가 2명(3.2%), 30대가 38명(60.3%), 40대가 20명(31.7%),

50대 이상이 3명(4.8%)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수사경력은 9.46년(표준편차 = 5.791)이었고, 현 소속 부서는 수사과가 35명(55.6%), 형사과가 18명(28.6%), 여성청소년과 등 기타 부서가 10명(15.9%)이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연구참여 동의서, 참여자 안내문 및 연구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연구 설문지에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즉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 간의 동일성 확인 방법'에 관한 문항과 '참여자에 관한 문항'을 편성하였다. 먼저,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확인 방법에 관한 문항은 '현재까지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소속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검토해 본 경험' 및 '신문 참여의 방법으로 소속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검토해 본 경험'에 대하여 '있음' 또는 '없음'을 선택하고, '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빈도(1회~5회 이상)를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속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검토해 본 경험'에 대하여 '있음' 또는 '없음'을 선택하고, '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빈도(1회~5회 이상)를 선택하고, 검토 방법을 서술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수사경력, 현 소속 부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완성된 설문지를 경찰청 내부 통신망 또는 외부 인터넷망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송부한 후,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결과

경찰 수사지휘자의 조서 왜곡 통제 방식 및 정도

경찰 수사지휘자의 조서 왜곡 통제 방식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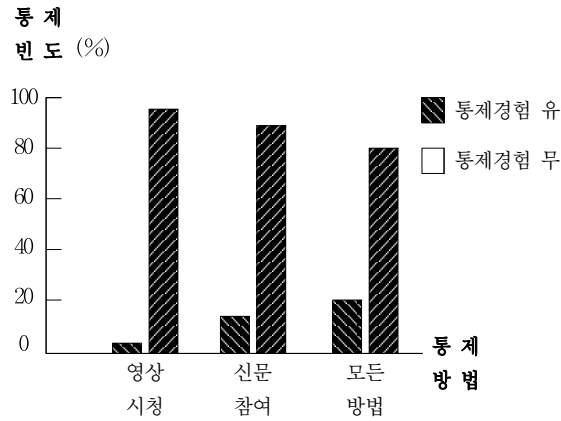


그림 2. 조서 왜곡 통제 방식별 통제 빈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 방식별 경험 빈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영상녹화물 검토를 통한 조서 왜곡 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3명(4.8%), 신문 참여를 통한 조서 왜곡 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9명(14.3%), 다른 방법을 통한 조서 왜곡 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2명(19%)이었다(그림 2 참고). 세 개의 문항에 대하여 복수로 '있음'을 선택한 참여자가 있었고,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경험한 참여자가 63명 중 12(19%)명이었다. 조서 통제 유경험자 12명의 평균 검토 회수는 3.58회(표준편차 = 1.62)였다. 영상녹화물 시청 또는 신문 참여 이외의 조서 왜곡 검토 방법으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방법', '제2회 피의자신문을 직접 받는 방법'이 언급되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서의 왜곡을 통제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고, 그나마 통제 경험의 빈도는 수사부서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 3.58회에 불과

했다. 즉, 조서 왜곡 통제 경험자가 현저히 적고, 유경험자의 조서 왜곡 통제 경험 빈도도 극히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방법(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만 허용된다는 판결)과 같이 법리 상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확인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한다는 응답이 있어, 앞의 경험치(빈도)는 그 의미를 더 축소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2는 연구 1의 현실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보완적 의의를 갖는다. 즉, 왜곡된 조서가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1의 결과와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서 왜곡의 현실적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구 2는 설문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된 관계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로 경찰 수사지휘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관계로, 그 결과를 수사지휘자 전체 또는 판사의 의사결정에까지 일반화할 수 없다. 검사,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 논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인적 증거는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이지만(손동권, 신이철, 2016, p. 517), 주관적 성격이 강하고 왜곡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운용을 위해 법령에 의한 통제 및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김현숙, 2008, pp. 51-61; 이형근,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각종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이형근, 조은경, 2014). 조서작성 단계에서 왜곡이 형성되고(이형근, 2016, p. 49), 조서정정 단계에서 왜곡이 모두 여과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이형근, 2016, p. 66, 72), 수사지휘자에 의한 조서평가 단계를 거친 조서에도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특히, 수사지휘자가 단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나아가 조서 왜곡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의 왜곡이 경찰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 경찰 수사지휘자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를 설문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다.

연구 1에서는 왜곡된 조서가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연구 2에서는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연구(이형근, 2016, p. 49) 및 조서정정단계에 관한 연구(이형근, 2016, p. 66, 72)의 결과와 종합하면, 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에 관한 입체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 가령, 「① 수사관은 수사사항에 따라 일정한 심증을 형성하고, 심증은 조서의 왜곡을 야기함; ② 수사관이 조서를 왜곡하더라도 정정자가 모든 왜곡을 정정하지는 못함; ③ 수사지휘자는 왜곡된 조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서의 왜곡을 온전히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함; ④ 다수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 수사관은 부지불식간에 ‘조서를 적당히 왜곡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구나’라는 인식, 나아가 ‘조서를 적절히 꾸며야 사건을 원하는 대로 종결할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됨」이라는 논증의 고리를 상정해 볼 수 있다(일종의 ‘학습효과’).

또한, 「① 수사관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을 더 많이 함; ② 정정자는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 정정에 더 취약함; ③ 생략 형태의 왜곡도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영향을 줌; ④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 수사관은 ‘조서를 왜곡하려면 생략 위주로 해야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 나아가 ‘생략만 해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됨」이라는 논증의 고리를 상정해 볼 수 있다(일종의 ‘선택적 강화효과’). 이와 같은 학습효과 및 선택적 강화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을 이해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조서 왜곡에 있어 학습효과 및 선택적 강화효과를 작동하게 하는 작성자 요인, 정정자 요인 및 지휘자 요인이 공히 조서를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조서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두 가지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서제도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서제도와 공존하면서 그 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영상녹화물은 수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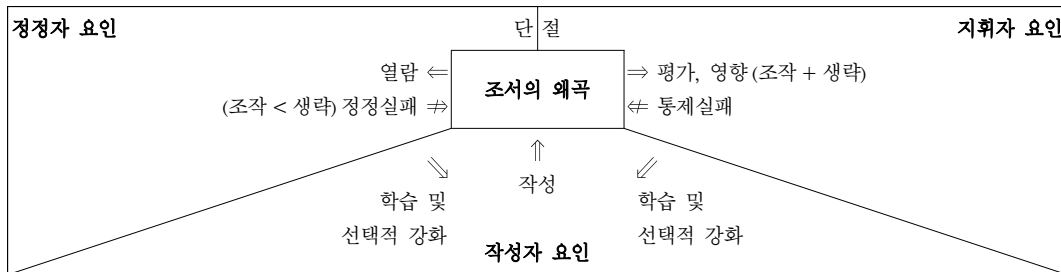


그림 3. 조서 왜곡에 관한 학습효과 및 선택적 강화효과 모델

에 의한 진술증거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 왜곡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사후에 통제할 수 있게 해주므로(박노섭, 2004; 조정래, 2011; Leo & Davis, 2004; Meissner & Kassin, 2004), 조서 왜곡에 관한 작성자 요인의 발동을 차단해주고, 정정자 및 지휘자 요인(정정·통제실패)의 기여를 낮추어 줄 것을 기대된다. 한편, 조서의 왜곡은 작성자의 편향이나 잘못된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조서 왜곡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지나 조서작성 역량의 미숙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서와 조서 왜곡의 의미, 올바른 조서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였으므로(2020. 2. 4. 일부개정 법률 제16924호 제195조 제1항), 향후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상급 사법경찰관에게 귀속될 전망이다(장승혁, 2020).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실제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의 준수 및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김태명, 2019). 그렇다면 상급 사법경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조서의 왜곡과 같은 부적법·부적정한 수사 관행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가령, '309동 성폭행 사건'에서 조서의 왜곡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던 검사의 역할을 이제는 상급 사법경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찰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 왜곡을 감시·통제하기 보다 오히려 왜곡된 조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수사인력과 수사환경을 고려할 때(이형근, 2020a, pp. 75-82), 수사지휘자로 하여금 모든 소속 수사관의 모든 조서를 영상녹화물과 비교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상녹화제도의 강화 및 이를 통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의 확장, 수사실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라는 간접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의무적 영상녹화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조서 작성자와 수사지휘자의 친밀성(신홍임, 2017), 조서의 메시지 프레임적 특성(성세연, 정경미, 2018), 조서 왜곡에 대한 환류의 지연성(Brehmer, 1992)이 수사지휘자의 부적정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오류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제정 수사준칙 등에 "검사, 수사간부 등 범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조서의 왜곡 가능성 등 그 불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하여야 하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이형근, 2020a, p. 295, 이형근, 2020b).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열람 및 정정 절

차의 강화(이형근, 2020a, p. 361, 이형근, 2020b)와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연구가 진술증거제도의 개선과 후속연구의 수행에 미력을 보탬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이형근은 현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문기법, 조서왜곡, 진술증거의 실증적·법리적 평가이다.

조은경은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사면담, 진술분석, 행동분석, 반사회적 행동이다.

이미선은 현재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폭력 피해자 수사면담, 진술신빙성 판단, 목격자 증언, 거짓말 탐지이다.

참고문헌

김태명 (2019).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7(1), 3-34.

김현숙 (2008).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광배 (2014. 10. 27.). 재판과 심리: 뒤집기. *대한변협신문* 516.

박노섭 (2004). 수사절차상 신문과 비디오 녹화 제도. *형사정책*, 16(1), 103-144.

박노섭 (2010).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장신중경정사건(2009.4.9, 2007도 9481)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0(2), 3-20.

박노섭, 이동희, 이운, 장윤식 (2014). *범죄수사학*. 용인: 경찰대학 출판부.

박재현 (2010). 배심제와 법심리학: 사법제도와 심리

학의 만남. 서울: 오래.

손동권, 신이철 (2016). *새로운 형사소송법(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신동운 (2014). *신형사소송법(제5판)*. 서울: 법문사.

신홍임 (2017).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 집단규범에의 동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103-123.

엄명용 (2004).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진술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상지 (2011).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검사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1(2), 3-46.

이운 (2015).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상 (2014). *형사소송법 제9판*. 서울: 박영사.

이형근 (201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 조서의 작성, 정정 및 평가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형근 (2019). 조서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형사정책연구소식*, 149, 30-34.

이형근 (2020a).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형근 (2020b).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제정 수사준칙상 임의수사 조항에의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8(3), 3-37.

이형근, 조은경 (2014).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4(2), 29-53.

장승혁 (2020). 검찰권의 제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형사법연구*, 32(2), 261-296.

성세연, 정경미 (2018). 이익충돌 상황에서 설득 메시지의 프레이밍 및 반복에 따른 도덕적 의사결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41-562.

- 조정래 (2011).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36, 329-360.
- Bazerman, M. H. (1994). *Judgment in managerial decision-making (3r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Brehmer, B. (1992). Dynamic decision making: Human control of complex systems. *Acta Psychologica*, 81(3), 211-241.
- Chisum, W. J., & Turvey, B. E. (2011). *Crime Reconstruction (2nd Edition)*. Waltham, USA: Academic Press.
- Coulthard, M. (2002). Whose voice is it? Invented and concealed dialogue in written records of verbal evidence produced by the police. In J. Cotterill, (Ed.),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pp. 19-3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as, T. K., & Teng, B. S. (1999). Cognitive biases and strategic decision processes: An integ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6, 757-778.
- Findley, K. A., & Scott, M. S. (2006). The multiple dimensions of tunnel vision in criminal cases. *Wisconsin Law Review*, 2006(2), 291-397.
- Huntley, J. E., & Costanzo, M. (2003). Sexual harassment stories: testing a story-mediated model of juror decision-making in civil litigation. *Law and Human Behavior*, 27(1), 29-51.
- Komter, M. L. (2006). From talk to text: The interactional construction of a police record.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9(3), 201-228.
- Lamb, M. E., Orbach, Y., Sternberg, K. J., Hershkowitz, I., & Horowitz, D. (2000). Accuracy of investigators' verbatim notes of their forensic interviews with alleged child abuse victims. *Law and Human Behavior*, 24(6), 699-708.
- Leo, R. A., & Davis, D. (2010).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Seven psychological processes. *The Journal of Psychiatry & Law*, 38, 9-54.
- Meissner, C. A., & Kassin, S. M. (2004). "You're guilty, so just confess?!" Cognitive and behavioral confirmation biases in the interrogation room. In G. D. Lassiter (Ed.), *Interrogations, confessions and entrapment* (pp. 85-106). New York: Kluwer Academic.
- Olsen-Fulero, L., & Fulero, S. M. (1997). Commonsense rape judgments: An empathy-complexity theory of rape juror story mak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3(2-3), 402-427.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242-258.
-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189-206.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In R. Hastie (Ed.), *Inside your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pp. 192-2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Charldorp, T. C. (2012). *From police interrogation to police record*. Phd thesis, Vrije University.
- Wagner, R. K. (1991). Managerial problem solving. In R. J. Sternberg, & P. A. Frensch (Eds.), *Complex problem solving: Principals and mechanisms* (pp. 159-18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ells, T., & Leo, R. A. (2008). *The wrong guys: Murder, false confessions and the Norfolk 4*. New York: The New Press.

1 차원고접수 : 2020. 10. 15.

수정원고접수 : 2021. 03. 18.

최종게재결정 : 2021. 03. 31.

The Effect of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on Investigative Directors' Evaluations about Suspects' Veracity

Hyoung Keun Le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unhyung Jo

Dongguk University

Mi Sun Yi

Dongyang University

Investigative directors have controlling power on investigative actions. However, it is shown that distortions are problematic in paper record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on investigative directors' decision making, and the methods and frequency of the control of the directors. In the study 1, total 90 investigative directors reviewed one of the three versions of paper records (30 'original', 30 'committed', 30 'omitted'), then the directors were asked to evaluate the suspect's veracity. The Study 2 surveyed 63 directors including how and how often they examine the authenticity of paper records. The results showed that (1) directors in the distorted records groups evaluated the suspect more deceptive than those in the original record group did. (2) The omitted paper record also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directors' evaluations about the suspect's veracity. (3) Investigative directors rarely checked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s by watching video records or participating in interrogation procedures. In the conclusion, 'A Model of Learning Effect and Selective Reinforcement Effect in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and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an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istortion of paper record, commission, omission, investigative director, evaluation about veracity*